Special Feature

스웨덴에 부는 보수의 바람 :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살아남았다

Annika Berg (스웨덴노동생활연구소(SNIWL) 연구원)

"2006년 9월 총선 승리로 정권을 획득한 중앙당, 자유당, 기독민주당, 온건당 등 우파연합의 사회 및 노동정책 변화"

2006년 9월 16일 스웨덴 전역에서는 총선이 실시되었다. 선거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으며 여론조사는 '좌파'와 '우파'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치의 양보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1년 전 중앙당, 자유당, 기독민주당, 온건당 등 4개 당이 연합한 스웨덴연합(우파연합)의 승리로 끝났다. 우파연합은 48.2%, 사민당 · 좌파당 · 녹색당은 46%의 표를 얻었다. 사민당은 35%로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하였으며, 온건당이 26.2%로 그 뒤를 이었다.

사민당 정부는 즉각 스웨덴의회의 의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온건당 당수인 프레드릭 라인펠트는 신임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신정부 내각을 구성했고, 그의 내각 구도는 곧 스웨덴의회에 상정되었다. 라인펠트 신임 총리가 1990년대 집권한 칼빌트 전 총리를 신임 외무장관으로 임명하자 스웨덴 유권자들은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우파연합의 모든 당이 내각에도 참여했고, 그 중 온건당은 총리, 재무장관(안더스 보그), 외무장관, 노동시장장관(스벤 오토 리토린)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였다. 1주일 뒤 신정부는 스웨덴의회에 정부 선언(Government Declaration)을 제출하였다. 정부 선언은 향후 4년간의 통치 의도와 목적을 명시한 정책선언문이다. 10월 16일에는 2007년 국가예산안이 제출되었다. 국가예산안은 노동시장, 특히 실업보험 및 소득세 관련 변화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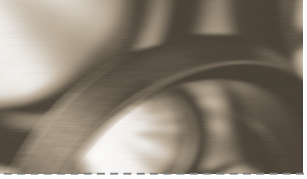
■ 신규 일자리, 소득세 인하

신정부는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새로운 접근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자 한다.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소규모 자영업 지원은 신정부 노동정책의 근간이다. 일례로 노동의 수익성이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소득세 감면을 위한 개혁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득세 개혁은 '일자리를 위한 감면(Jobbavdrag)'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실업보험의 조건과 급여수준(아래 참조)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발표된 것이 없다. 스웨덴연합과 사민당이 단행키로 한 노령연금제도의 개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다만, 사회보험제도 중 부성휴가 등은 시간을 두고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보험의 실제 절차 및 남용방지 수단 등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단기 고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

실업 관련 조치는 축소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대신, 사민당이 추진해 온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을 폐지할 것이다. 일례로 실업급여를 받고 1년 휴직하는 동안 해당 업무를 실직자에게 맡기는 형식의 비교적 최근에 실시한 제도는 즉각 폐지될 것이다. 대신 '뉴스타트 일자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년 이상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노동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부문의 고용주에게는 사용자 분담금 제도를 감면시키거나 폐지할 생각이다. 다만 EU국가들과의 경쟁상황 등이 분명하지 않은 관계로 EU 규칙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 분담금 감면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야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계서비스업 관련 세금도 감면될 것이다. 장기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및 개발보장 등도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선언에서 정부는 소위 '스웨덴 모델'을 보호할 것이라고 확약했다. 이는 즉 기존처럼 노동시장당에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임금, 단체협약 시스템 등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노동법 개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 2007년의 변화

2007년 국가 예산안에는 정책선언, 그 목적 및 의도 등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2007년에 실시 예정인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실업보험에서 실업급여는 신청인 기존 임금의 80% 수준이 될 것이다. 200일 후에는 70%, 301일 이후에는 65%로 줄어든다. 기간에 상관없이 일일 SEK 680 이상을 수령할 수 없다. (현재는 처음 300일까지는 임금의 80%을 실업급여로 받으며 일일 최고액은 SEK 730이다. 101 일 이후부터는 최고액이 SEK 680으로 삭감된다.)

○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450일까지 임금의 70%를 수령한다.

○ 실업보험의 수급조건도 엄격해진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전 12개월 중 최소 6개월을 근무해야 하며 월 근무시간도 최소 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현재도 6개월 근무조건은 존재한다.)

○ 학생 조건은 폐지된다.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실업급여 수령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실업기금은 실업보험 자금 조달을 위해 분담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실업보험에 가입한 일반 근로자는 200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월 최대 SEK 300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은 해당 지부의 실업률에 따라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정부는 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2007-2009년 사이 SEK 500억 규모의 공기업 매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이미 6건의 1차 매각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에는 Telia Sonera(스웨덴과 핀란드의 휴대폰 사업자)와 Nordea(스칸디나비아의 은행 및 보험사)도 포함되어 있다.

■ 복지국가

정부 선언과 신규 예산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으니 이제 '과연, 구 스웨덴 모델이 복지국가 종국에는 사라질 운명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고자 한다. 노동정책에 대해 신정부는 초기부터(또한 이를 정부선언에 명시했다) 노사관계제도, 단체교섭, 사회적 파트너십 등과 관련해서는 변경될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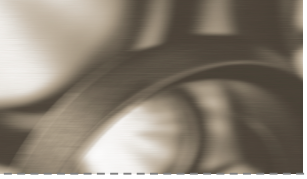
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동법 규정에 대해서도 특별히 수정할 의도도 없다. 스웨덴의 노사관계제도는 매우 독립적이며 정부가 노동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다만 사회정책 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보험제도나 이후 의료보험제도 등과 같이 규정이 엄격해지는 것도 있다.

투표자들이 사민당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충분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사민당 의원 중에는 당이 오랜 기간 스웨덴을 괴롭혔던 실업 문제에 대해 당이 분명한 방향성도 없고 관심도 없어 보였다는 점을 들었다. 사회보험제도가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관대했다는 점을 드는 사람도 있었다.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러한 사회보험을 충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지쳐 있었다. 여전히 사민당이 의회 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고, 투표자들이 두 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지지율에는 2.2%라는 미미한 격차만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과연 이번 신정부가 1990년대 초에 집권한 우파연합 정권인 '청색' 연합 정부와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이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온건파 연합은 선거 캠페인에서 이미 스스로를 새로운 노동자 당으로 규정했다는 점이 분명한 차이점이다. 또한 과거 정부의 관료제도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면서 즉각적으로 노동시장위원회, 국영보험위원회, 스웨덴노동생활연구소(SNIWL) 등 사민당 기관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스웨덴의 정부기관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200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400여 명의 연구원과 기타 직원들이 이들 기관을 떠나야 한다. 관료제도의 축소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촉박하게 실시하여 수많은 교수와 선임연구원, 기타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만한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다행히도 SNIWL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의 연구생들은 대부분 스웨덴의 각 대학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 실업통계

마지막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스웨덴의 실업통계와 사민당의 실업통계 관련 진실은폐 의혹에 관해 살펴보자. 이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실업과 실업관련 통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집계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실업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스웨덴통계청(SCB)이 발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이다. 이 두



기관에서는 각자가 실업과 관련하여 채용한 정의와 자료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목은 같지만 통계 수치는 다른 월간 실업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일례로 스웨덴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10월 현재 스웨덴의 완전실업(open unemployment)은 전체 노동인구의 4.6%(실업자 211,000명)이다. 이는 현재 노동인구조사의 자료에 기반한다. 완전실업에는 학생(35,000명)과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실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 중' 통계에 포함되었다.

노동시장위원회에 따르면 10월 155,000명의 근로자가 다양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완전실업은 4.0%, 불균형 실업률은 74%였다. 불균형 실업률이란 완전실업에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추가한 실업률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인구의 평균 3% 정도가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이다. 이러한 수치는 일자리를 찾은 근로자,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중인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매월 발표되며 이러한 통계 처리의 기준은 의회의 1986년 결정에 따른다.

선거 기간 중 스웨덴연합은 관련 이슈에 주목하였다. 신정부는 공식 실업통계용 실업의 정의를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변경할 것인지 아직 정한 바 없으며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결 론

새로운 온건-자유-기독민주-중앙당 정부는 승리를 확정하자마자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총선 1년 전부터 미리 자신들의 정부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실 2006년 10월 발표된 정책 변화는 세부 내용은 당시 확정 발표되었지만 스웨덴 국민에게는 새로울 것이 없었다.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인의 비용 절감과 고용이 용이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취업근로자를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과 실업보험료 증가라는 변화가 있었다. 실업자의 조건은 보다 엄격해졌으며, 이렇게 한 데는 무엇보다도 실업급부의 과용을 줄이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스웨덴 모델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스웨덴 복지제도는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고 있다. 우파연합이 사민당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물려받을 수도 있다. 2006년 스웨덴의 운송, 건축, 서비스 부문의 중소기업 확대로 인해 최근 대폭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는 점과 경제상황이 좋았다는 점이 신정부의 출범에 순풍을 달아주었다. 2006년과 2007년 신규 창출 일자리는 175,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KLI